

FO

즘에 들어서 이십 수년 전에 배웠던 장지연 선생님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나의 뇌리를 스치곤 한다. 20C초 일본제국주의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조선을 약탈하여 마침내는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보호조약(1905)을 강제로 체결하여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였다.

이에 조선의 수많은 의사, 열사들이 자결과 무력으로 일본에 대항하고 특히 장지연선생은 황성신문에 크게 을사보호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선백성들의 비분을 만방에 폭로하였던 것이다. 어

찌할 수 없었던 현실 앞에 울부짖었던 선생님의 절박한 분노를 헤아리노라면 절로 가슴이 저미어 온다. 원래 세기말적 현상이란 것이 혼란스럽다고 일반상식처럼 스쳐 말들 하고는 하지만 직접 닥쳐 격고 있노라니 좀처럼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다. 식자(識者)들은 말한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한 세기전의 구한말 시대의 상

황과 흡사하다고.

따라서 운명적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대비책을 빈틈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선택이 향후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질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을 그 누군들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80년대 중반 무렵부터 세계무역질서 개편의 서곡이 울리고 있을 때 우리는 국내 정치상황에만 매달려 급기야 현실로 닥쳐 오고서야 무슨 유행어처럼 떠들어 대고 있으니 한 세기전 우리가 겪어야 했던 슬픔과 고통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 대응력이 미숙한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 것인지 세계 역사는 물론 반만년 우리의 역사가 일러주고 있지 않은가? 한 세기전 우리는 자존을 상실하는 치욕을 맛보았으며, 분단과 민족상잔의 아픔을 곱씹었고, 굴욕적 자세로 경제성장에 매달려 무수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았던가?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사뭇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최근에 이르러 개방은 세계적 추세로 필연적이나 국민 각자는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에 앞장서라는 시대적 요구에 내몰리어 정신을 못차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다 그간 빼뚫어진 국내 정치의 비도덕성으로 인한 사회적 모순점이 산적되어 개혁이라는 커다란 과제까지 감당해내야 하는 이중 역할을 하느라고 더욱 더 어수선하여 자못 혼란스럽다. 그러나 세계화와 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어진 지상과제이나 그 준비과정이 엄밀한 연구 검토없이 국제정치에 내몰리어 지나치리만큼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았던가 하는 아쉬

신 시일야방성대곡

We Need to Provide a New Preparation

盧永煥 / 기린건축사사무소
by Noh Young-Hwan

움이 남는다.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자못 의구심이 발동한다. 왜냐하면 이를 전담하는 부서의 인원과 예산, 전문성의 결여, 시일의 촉박함, 과중한 업무량, 국내 정치구조의 특성을 감안하면 단순히 행정적 절차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처리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신속하다던가, 과도하게 이상적(理想的)이라면, 역설적이지만 경솔하다던가, 알맹이가 없는 비현실적일 확률이 다분히 높다 하겠다. 이러한 과제는 아무리 심사숙고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점진적인 대안의 강구가 불필요 하였을까? 좀더 구체적 방안의 수립은 불가능하였을까 등을 생각하여 보면 절로 긴 탄식이 새어 나오곤 한다. 정성스럽게 검토되지 않은 불비한 법과 제도를 국제적 압력과 정치적 특수성에 내몰리어 급박하게 시행하노라면,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요소가 발생되어 사회적 역작용의 발생은 필연적일 것이다. 세계화와 개혁에 대한 개념정립이 미처 되지 못한 일반국민에게는 당장의 생존이 더욱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고, 이러한 제도 안에서 생존하려면 고도의 변칙기술을 사용치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추상같은 명령에 내몰리어 무지한 국민의 물이해를 타하며, 결국은 특별법 만을 양산하게 되어 더욱 더 우리 사회는 복잡하여지고 행정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의 빈번한 발생은 정책의 불신만 깊게 하고 장차 다른 국가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바로 개혁의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또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일부 공직자들의 세계화에 대한 그릇된 개념에서 비롯된다. 세계화란 국가 역할의 축소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단체의 역할 및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여기서 국가 역할의 축소란 의미는 단순히 국가전환의 위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전의 총괄적이고 획일적인 관리 체제에서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성을 발휘하

도록 국가의 부적절한 관여를 배제한다는 의미이지 단순히 물리적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개인 또는 전문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때까지는 물론이고, 더욱 더 정진하도록 안내하고 협조하여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불간섭이 세계화인 것처럼 오해하여 자칫 국가의 방임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국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세계화에 대한 대응 노력에 앞서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각 전문단체가 나름대로 정확히 짚고 있는가 확인하여 주는 문제일 것이다. 즉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유·무형의 이입요소들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져야 한다. 둘째는 각 전문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미흡할 경우 자생력을 갖추도록 조력하는 차원에서 민·관의 협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는 각 전문단체들이 유기적 체계를 유지하고 종합정보체계를 이루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추세에 신속히 적응토록 매개체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는 부적절한 관여로 역작용이 작용치 않는지 세심한 배려가 필수적일 것이다. 단번에 완성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옳다하더라도 현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개방 이전에 우리의 소홀한 법과 제도로 인하여 자멸하고 말 것이 아니겠는가? 다소 늦어서 우리가 겪어야하는 피해가 있더라도 적응이 가능토록 점진적인 정비를 하던가,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소홀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과 공동체 인식을 같이하여야 하며, 민간단체와 상호협력체제 구축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역사적 대응능력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시일야방성대곡」이 등장하게 되어서는 결단코 안될 일이다.